

국힘 전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잇따라

전북 국회의원 “홀대 넘어 폄훼... 석고대죄하라”

“180만 도민 등과 함께 대정부투쟁 나설 것” 경고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 김문덕·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운·이원택·이춘석·정동영·한병도 의원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사태와 관련, “전북 홀대 넘어 전북 폄훼” 나선 국회의원,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진행자가 전북을 비하하고, 도민을 모독하는 말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당은 180만 도민과 함께 분노하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목적을 높였다.

이들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 이후 다른 진행자는 ‘전북을 따로 해야 하나’라는 망발을 쏟아냈다.”며,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

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에 전북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전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180만 전북도민은 간첩이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철 지난 간첩 타령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망언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점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꺾버리대회가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한 정권은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전북 죽이기에 나섰다. 나아가 전북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려 78% 삭감하는 난도질을 감행하며, 도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고 목적을 높였다.

한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 도민이 팔팔 뭉쳐서 투쟁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권은 유지부동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전북은 3개월여의 처절한 싸움 끝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을 일부 복원해 낸 바 있다.”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사태와 관련, “전북 홀대 넘어 전북 폄훼” 나선 국회의원,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정부 내 고위직에 전북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타 지역과는 달리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한 등 전북차별과 홀대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다.”고, 전북의 홀대를 넘어 폄훼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새만금 예산 투쟁 이후 우리 전북도민은 다시는 이런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어제 나온 망언으로 그 작고도 단명한 기대조차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전북 일부 복원해 낸 바 있다.”며, “이번

인가?”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을 ‘새로운 시대’라는 경제 점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은 간첩’이라는 천박한 인식 아래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과제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전당대회에서 나온 망언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한동훈 신임 당 대표의 ‘비례로 가자’는 취임 일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전북도민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전북 홀대와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특히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북 죽이기, 전북 홀대가 또다시 반복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전북 죽이기에 나선다면,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의 일당은 180만 전북도민, 500만 출향 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

전용태 도의원, 실종자 발생 예방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종자가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합리적 대안을 주문했으며,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황해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이만재 의원은 미등록 경정사자 주택의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안전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김태환 기자

오창숙 남원시의원, 남원 당노병 환자 지원 조례 등 제정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은 제266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제1형 당노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 개정 및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당노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상자를 19세 미만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12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 중위소득 120% 범위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첫 번째 사례이다.

또한 도시디자인 조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의 도시디자인 계획 단계부터 남원경찰서 범죄예방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교육 영양을 고루 갖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초석을 깔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앞으로도 남원시 행정이 좀 더 섬세히 시민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野 소속 전북자치도의원 “몰상식·천박함의 극치”

민주·진보·정의당 소속 도의원들 “국힘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해야”

2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의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기성천외한 망언이 나왔다.”며,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고 분을 참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50년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로 얼룩져 있는 비극의 연속였고 아직도 그 울기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옥죄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배제와 차별, 누락, 무관심, 방치 등과 같은 온갖 부

정적 딱지를 붙여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양에 차지 않는 것인 지, 전북에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같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다.”며, “이번 정치적 망언 역시,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오던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참을 수 없는 배설로 내뱉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망언이 전당대회를 진행하

는 사회자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라 이제 그게 양에 차지 않는 것인 지, 전북에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한 정치적 망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하루빨리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오욕으로 점철된 전북 비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민약 이마저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전북 전주 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이힘 전북 간첩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들지 않는다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통합농민혁명에 서려 있는 저항과 혁명의 DNA 를 거도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도민들은 이번 사태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역사를 지내오며

‘若無胡虜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 국가)’라는 말처럼 ‘전북이 없다면 대한민국도 없다’라는 자존감 하나로 버티고 발전이 좀 더디더라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느냐며 분에 겨워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문화제도개선 법안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

민주 김문덕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 개정법안’ 등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덕 의원(전주)은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된 문화제도개선 법안들을 재정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평생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로 제정, △영화의 정의 개정,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

는 규율 정비 등이다. ‘대중문화예술평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평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평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평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전문가 위촉,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술평생법 위원 요건의 업무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었고, 국가유산수리 분야 보유자의 고령화에 수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 영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했다.

/이만호 기자

“140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무시”

민주 이성운 의원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0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김승원·이건태·장경태·박근택 의원(순위 무순)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들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바 있다.”며,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기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중언감정법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입니다.”, “이종섭은 박근택 법제사법위원의 02-800-7070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발할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하는 등 국회중언감정법 제12조를 위반했으며, 임기훈은 동 위원의 ‘대통령실 경호 여부를 지금도 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방비서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대통령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안보사항’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호 여부는 안보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국회중언감정법 제12조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위증을 한 증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며, 임성근은 장경태 법제사법위원의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초정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자 이종호씨’ 관련 질의에 대해 위증했음이 확인되었고, 김동혁은 ‘박정호 대령이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다 지웠다’는 내용이 박정호 대령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게 맞느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의 질의에 대해 ‘(박정호 대령)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작년 8월 3일 압수수색이 집행된 박정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휴대폰에서는 6,700개의 파일이 확인되는 등 김동혁의 답변이 위증이었음이 확인되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집중되어 있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위증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단장이라며, 임성근은 장경태 법제사법위원의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초정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이만호 기자